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1994. 9.

金圭倫 (國際研究室 研究委員)

全東震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北韓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體制維持를 담보받고자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北韓의 核問題가 美國과 北韓간 交渉으로 해결될 경우 예상되는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肯定的 側面과 함께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4강의 간섭 및 개입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否定的 側面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남북한관계 발전에 주변국의 협력을 誘導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1990년대 동북아질서 및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 9.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본 연구는 北韓의 核問題가 美國과 北韓간 交渉으로 해결될 경우 예상되는 미·일의 對北韓 關係改善 문제를 客觀적으로 展望하고, 양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南北韓關係에 미칠 肯定·不定的 影響을 단·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 美·北韓 關係改善 展望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透明性を 제고하기 위하여 북한과 연속적인 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카드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노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개발의 凍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特別査察을 포함한 안전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북 관계개선의 速度와 水準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變數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1994년 9월 23일로 예정된 미·북 3단계 2차회담에서 透明性を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代案에 의하여 해결될 경우, 관계개선에 대한 미·북한간 회담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 연장협상 이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연락사무소 설치 등 유화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체제 완전 복귀를 確約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북 관계개선은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핵개발의 透 明性을 보장하고,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 미사일수출 및 테러행위 중지, 미군유해 송환, 대미비방 중지,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 등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段階的 進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북한간 국교정상화는 북한 핵투명성 보장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미국 국내법 절차상의 이유와 행정부와 의회간 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 日·北韓 關係改善 展望

일본은 한반도 全地域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대한반도 정책 기조하에 전후처리 명목으로 대북한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3단계 2차 미·북한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 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인 대북한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북한간에는 핵문제 이외에 보상 형식과 액수 문제, 그리고 역사해석 문제 및 이은혜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 안정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해 일본의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북한간 諸般 懸案問題에서 轉向的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북한수교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핵문제가 미·북한 고위급회담에서 해결되면 일·북한 수교교섭은 양국간 현안문제에 대한 북한의 양보를 기초로 하여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3. 美·日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1) 美·北韓 關係改善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미·북한 관계개선과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중 남북한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문제는 ①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와 한반도 駐屯美軍 減縮問題, ② 남북한 軍備縮小問題, ③ 平和協定 締結問題, ④ 核연감속로의 경수로전환문제, ⑤ 투자 및 무역제한 조치 완화, ⑥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및 亞·太經濟協力體 참가에 대한 지원 등이다.

첫째, 미·북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주한미군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는 남북한 군사력의 감축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남한을 排除한 상태에서 미국과 양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북한과 한국·미국간 또는

남북한간 평화협정을 미국과 중국이 保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국은 민족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에 지원하는 동시에 경수로 지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 공조체제하에 多者的 支援機構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 및 무역제한 조치 완화 및 국제금융기구 참가 지원은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는 契機가 될 것이며,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북한 관계개선은 日·中·러 등 주변국가들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접근태도 변화를 통하여 남북한관계에 間接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미·북 관계개선이 진전될 경우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모색할 것이며, 러시아도 과거의 대북 영향력을 回復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대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변국가들의 대북한 관계변화는 남북한관계에 주변국가들이 介入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북 관계개선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 보다 더 활발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북아지역 多者間 安保協議體 구성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동북아 안보협의체가 한반도문제를 다루게 될 경우 南北韓關係의 安定化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남북한관계 進展에 障礙가 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셋째, 미·북 관계개선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등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多者間 經濟 協力 사업의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건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開放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관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日·北韓 關係改善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일·북한 수교후 北韓과 日本사이의 經濟交流는 短期的으로 北韓經濟를 活性化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북한에게 제공할 보상자금은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艱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經濟 沈滯의 本質的인 원인은 자력갱생의 閉鎖的 經濟路線과 中央執權的인 計劃經濟 體制의 非效率性 그리고 정치·군사 우위의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한 배상 및 경제교류 증대로 단기간내에 북한 경제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일·북한수교 후 대일 경제협력과 병행하여 남한과의 부분적인 경협도 증대해 나갈 것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제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남한과의 경협보다 체제안정과 선진기술 및 자본을 제공해 줄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과의 경협은 制限的인

고 補完的인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3) 交叉承認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국교정상화로 이어질 경우 남북한에 대한 주변4강의 交叉承認이 완성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불안정한 國際關係의 틀을 安定化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주변4강의 교차승인은 북한이 「대남 사회주의 혁명전략」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국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북한도 이를 계기로 南北韓 平和共存關係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교차승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들의 보장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변4강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와 관련, 교차승인은 미국과 일본에게 북한측에 대하여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 필요성을 설득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한간 군비통제를 남북한이 주도하더라도 그 실천에 대해서는 國際的 檢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보장국의 일원으로서 남북한간 군비통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에 참여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남북한 양측

의 군사력 및 군사배치 이동에 대한 정보교환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한 엄격한 감시·통제 등 검증기술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4. 韓國의 考慮事項

교차승인은 북한의 개방화 촉진 및 경제력 증대 등에 따른 統一費用 減少 효과를 발생시켜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차승인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강의 영향력 증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일·북한 경제교류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간 경제교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輕視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일의 대북한 수교가 한반도 통일문제에 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저지하고 주변국들로부터 통일에 필요한 건전한 정치·경제·안보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이 地域 安定者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협의하여 주한미군 잔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相互利益의 관점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일본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경제적 협력세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셋째, 주변4강 중 어느 한 국가의 압도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日·中·러 3국간의 일정한 牽制와 均衡維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은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를 협의함과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사이에 多者間 安保協議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은 주변국들에게 한반도통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沮害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한반도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美國의 對北韓政策	3
1. 美國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	3
가. 東北亞政策	3
나. 韓半島政策	10
2. 美國의 對北韓政策	14
가. 對北韓政策 基調	14
나. 美·北韓 關係 懸案: 北韓 核問題	16
3. 美·北韓 關係改善 展望	26
第 III 章 日本의 對北韓政策	30
1. 日本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	30
가. 東北亞政策	30
나. 韓半島政策	39
2. 日本의 對北韓政策	41
가. 對北韓政策 基調	41
나. 日·北韓 關係 懸案	42

3. 日·北韓 關係改善 展望	47
第Ⅳ章 美·日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50
1. 美·日의 對北韓 關係改善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50
가. 美·北韓 關係改善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50
나. 日·北韓 關係改善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54
2. 交叉承認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58
가. 東北亞秩序 再編	58
나. 南北韓 平和體制 構築	60
다. 軍事的 信賴構築 및 軍縮問題	61
第Ⅴ章 結 論	64

第 I 章 序 論

北韓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體制維持를 담보받고자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원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하여 조성된 동북아지역의 긴장상태는 현재 미·북한간 직접접촉으로 인하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의 국제적 속성으로 인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한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현상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한국은 탈냉전시대의 국제적 조류를 활용하여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양국과의 수교 이후 한국은 양국과의 경제교류는 물론 군사·안보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상대적으로 國際舞臺에서 萎縮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북한에 대하여 경화결제를 요구하는 등 냉전시대에 제공하였던 경제 및 군사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하였다.

본 연구는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궁극적으로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완성시킬 것이며, 四強의 南北韓 交叉承認 완성은 남북한관계 및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추진되었다. 즉,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4강의 간섭 및 개입 가능성

을 증대시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北韓의 核問題가 美·北韓간 交渉으로 해결될 경우 예상되는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정책 분석을 통하여 미국의 대북한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며, 미·북한 관계개선 전망을 시도한다. 둘째, 일본의 대북한정책 및 양국간 현안을 분석하여 일·북한 관계개선 전망을 시도한다. 셋째,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한국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第 II 章 美國의 對北韓政策

1. 美國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

가. 東北亞政策

(1) 冷戰以後時代 美國의 世界戰略

냉전시대의 국제질서하에서는 군사·안보면에서 양극체제하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東·西 양 陣營이 對立하였고, 그 결과 양 진영간의 경제교류는 미미하였으며, 자본주의 국제경제체제하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대별되는 南·北간 관계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한편 소련의 붕괴로 대표되는 냉전의 종식은 기존 국제질서를 脫理念 및 脫軍事化하였다. 또한 과학의 발달과 경제의 凡世界化 傾向은 국가간 相互依存性을 증대시켜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의 관리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의 전반적 추세를 냉전시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이 주도하던 공산주의 이념의 세계적인 퇴락현상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自由民主主義 理念의 全世界的 擴散이다. 둘째,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의 경쟁의식으로 인한 과거의 소모적인 대결의 지양과 相互依存的인 國際關係의 發展추세이다. 셋째, 냉전이후시대에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냉전

시대에 잠재해 있던 민족주의적 갈등이 탈냉전과 함께 표출되어 地域紛爭이 頻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채택 등 市場經濟體制의 전세계적 擴散이다. 다섯째,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질서는 군사·안보면이 강조되었던 냉전시대와 달리 경제면이 중요시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 각국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안보력의 허구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냉전이후시대에는 각국이 국가적 정책 중에서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정치·외교적 수단을 강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질서 변화속에서 미국은 唯一한 軍事強國으로 부상하였으며, 군사·안보 및 경제면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첫째,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체제가 전세계적으로 擴散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유럽공동체(EC)의 통합 강화와 일본 경제력의 지속적 상승 및 중국의 부상 등으로 세계질서는 單一·多極(Uni-multipolar)체제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냉전시대의 미국 중심 서방진영과 소련 중심 동구권의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냉전이후시대 국가간 관계는 복합적이며 유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¹⁾ 넷째, 경제력의 상대적 중요성 증대로 인하여 국가간 군사적 대결의 위험은 약화되었으나, 국가간 경제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위와 같은 냉전이후시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世界的 地位를 維持하고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전 세계적 확산, 유럽 및 아시아 대륙에서 세력균형을 통한 안정 유지, 정치·군사적 霸權國家 등장 방지 등을 전세계적 대외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軍事·安保 및 經濟政策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미국은 군사·안보면에서 핵 및 생화학무기 등 大量 殺傷武器의 擴散을 방지하여 전쟁 위험성을 줄이되, 局地戰 발생에 대비하여 「두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Win-Win Strategy)을 유지한다. 또한 국제적 분쟁에 대한 개입은 미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選別的으로 행하되 미국의 독자적 행동보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集團的

1) 헨팅턴 교수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 국제질서속에서 힘의 분포의 변화 및 국가간 관계 변화 등 세가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단일·다극적 세계(uni-multipolar world)로서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과 더불어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이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Samuel P.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Survival*, Vol. XXXIII, No. 1, January/February 1991, pp. 5~7 참조.

解決을 모색한다.²⁾

둘째, 경제면에서 미국은 경제력의 재건 없이는 대외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國內政策과 수출촉진 및 貿易赤字 縮小를 위한 강력한 통상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자간 무역기구를 통하여 세계경제의 자유무역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이념면에서 미국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및 국가에 대하여 미국의 중심적 국가이념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세계적 대외정책은 냉전이후시대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先導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역동성, 중국의 부상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미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美國의 東北亞政策

동북아지역은 냉전시대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가장 첨예한 지역의 하나로 지목되는 곳이었으며, 이와 같은 특성으로

2) 미국이 1994년 8월 18일 발표한 「연대와 확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주요한 지역에서 분쟁이 거의 동시에 발발하더라도 이를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최종안보전략으로 채택하였으며, 해외에서의 군사력 유지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결의를 과시하고 유사시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1994. 8. 20.

인하여 현재도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지역은 냉전시대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립하는 대결의 場이었다. 따라서 냉전시대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안보역할은 소련 및 중국의 팽창에 대한 견제와 자본주의 진영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核雨傘을 제공하고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역내 안보역할은 장기적으로 볼 때 美國의 經濟優先 政策에 따른 국방비 삭감요구에 직면하여 축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均衡者 또는 仲裁者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와 같은 미국의 의도는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잠시 보류되고 있다.

경제면에서, 미국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力動性을 중요시하여 지속적으로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대일본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에게도 공정한 무역을 내세워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문제는 매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7월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발표한 「新太平洋 共同體」 구상에 잘 나타나 있다.³⁾ 「신태평양 공동체」구상의 안보적 측면은 다음과 같

3) U.S. President Bill Clinton's Address to the National Assembly, July 10, 1993.

다. 첫째, 미국은 이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안보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역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지역의 경제성장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하에서 미국은 안보면에서 네가지 우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군의 지속적인 역내 주둔이다. 둘째, 大量殺傷武器 확산을 防止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노력이다. 셋째, 공동의 안보위협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한 새로운 地域安保對話의 모색이다. 넷째, 지역전체에 대하여 보다 개방된 사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한다. 이러한 우선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클린턴 대통령은 첫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5개 역내국가들과 유지하고 있는 양자적 안보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클린턴 대통령은 대량살상 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북한의 신형미사일 개발 및 중동지역에 대한 판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생화학무기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地域安保對話의 필요성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은 소련 위협의 소멸과 함께 등장한 종족분쟁, 지역불안, 난민문제 및 마약과 불법무기 등 냉전이후시대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태지역에서도 유럽과 같은 지역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아·태지역의 지역협력기구는 「다양한 위협과 기회」(multiple threats and opportunities)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multiple new arrangements)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위협과 기회란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조, 유엔의 평화유지군(PKO) 활동 및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분쟁에 대한 신뢰 구축 문제 등이다. 넷째, 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아지역의 일부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의 적용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민주주의의 확산이 국민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아·태정책을 분석하면 미국은 다음과 같은 동북아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정치이념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둘째, 안보면에서 역내 미국의 국익보호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면에서 시장경제체제를 확산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美國의 主導權을 維持하고 자국 경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안보면에서는 대중국 관계 회복·확대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및 지역안보대화의 발전을 통하여 역내 안보를 확보한다. 한편 경제면에서는 일본시장을 개방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

의 발전을 통하여 자유무역을 확대시킨다.

요약하면, 미국은 역내 경제·안보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기존의 兩者間 關係를 중요시하되, 「新太平洋共同體」 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내 경제·안보문제에 대한 多者間 接近方式을 漸進적으로 擴散시킬 것으로 보인다.⁴⁾ 즉, 미국은 지역안보대화 및 아·태경제협력체를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均衡者 및 調整者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기존의 주도권을 底費用으로 유지하고자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韓半島政策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한반도문제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한반도가 세계적 강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여있는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地理的 重要性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남한이 이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미국은 남한의 경제적 역동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4) 미국은 과거 양자 동맹관계 약화를 우려하여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구상에 반대하여 왔으나, 냉전이후시대 아·태지역의 새로운 안보문제에 대처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견지하기 위하여 광역적 차원에서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를 활용하고 小地域次元에서는 「동북아협력회의」(Northeast Asia Cooperation)를 추진하고 있다.

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바, 이는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번영된 사회 달성이란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정책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및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중대한 불안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동북아에 생성된 힘의 空白 상태에 유의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현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핵문제가 核擴散防止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北韓의 核開發이 주변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비증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미국이 한국전쟁 종결후 수립한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⁵⁾ 미국의 한반도정책 목표는 첫째, 한반도가 통일되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를 가지고, 둘째, 미국에 대하여 우호적이며 자유롭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셋째,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자력으로 국내치안을 유지하며, 넷째, 강국들의 하나가 공격하지 않는 한 자국을 방위하여 정치와 영토의 통합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첫째, 무력침략을 반대하는 유엔의 결의를 실행하고 전쟁의 재발을

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ume 15, Part 2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p. 1620~24. 이 채진, “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동북아 안보정세와 통일전망」 1993. 11. 19~20. 참조.

예방하며, 이 지역에서 공산주의의 지배를 막기 위하여 미국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한다. 둘째, 한반도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될 때까지 미국은 휴전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분계선(DMZ)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한다. 셋째, 만일 공산측에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면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행동할 것이다. 넷째, 만일 한국이 북침을 시도한다면 미국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 시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원조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철수를 고려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통하여 한국을 미국의 방위체제에 연결시키고 군사적 동맹국으로 발전시키며 한국군의 자위역량을 증강시킬 것이다. 여섯째, 미국은 한국이 민주제도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일곱째, 미국은 한국에 경제원조를 제공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한다.⁶⁾

냉전시대에 수립된 이와 같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한반도의 분단상황 지속으로 인하여 목표가 달성되었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國際關係 變化에 따라 再調整되고 있다. 즉, 냉전시대에는 안보관계가 안보위협, 군사전략, 군사정책, 군사력의 구조 및

6) 이채진 교수에 의하면 여덟째 정책으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공산측과 정치협상을 진행할 때 한반도의 중립화통일(a unified and neutral Korea)을 지지한다는 것이 있었다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중립화통일 방안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채진, 위의 글 참조.

군사비 등에 대한 국내·국제적 측면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었다면, 냉전이후시대의 안보관계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및 법적 측면까지를 총망라한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 안보관계는 양국에 의한 위협인식과 군사전략에 의한 고려와 동시에 양국간 경제관계, 양국의 경제상황, 미국의 대한 투자현황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점이다.⁷⁾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천명한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의 실현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간 무역액이 미국과 프랑스 및 이태리간 무역액보다 크며, 한국이 미국의 8번째 무역 상대국으로서 미국의 對亞·太經濟協力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1993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새로이 신설된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의장국으

7) William J. Taylor, Jr. "U.S.-ROK Security Relations: An American View," A Paper Prepared for the 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Sejong Institute/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onference on "America and Korea in a Changing Northeast Asia Order," Seoul, Korea, October 13~14, 1993, pp. 1~3 참조; 필자는 동구권 및 러시아 지원의 상실, 북한의 경제난, 한·미 무기체계의 증강된 능력 등으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의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중국, 일본과 함께 미국도 동북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한반도가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어느때 보다도 확고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로 선정되는 등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先導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⁸⁾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韓半島의 分斷現實 認定, 戰爭再發 防止, 平和統一 支持, 韓·美 同盟關係 維持, 韓國의 經濟安定 등으로 요약되며, 이러한 한반도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2. 美國의 對北韓政策

가. 對北韓政策 基調

미국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大量殺傷武器의 擴散을 防止하고 이념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미국의 정책목표에 배치되는 국가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미국은 한국전쟁이후 北韓과 敵對感에서 비롯된 대결관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閉鎖的이고 好戰的인 共產獨裁國家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선언 및 약속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였는 바, 북한에 대하여 강한 不信感을 가지고 있다.

8) Remarks by Winston Lor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at The Korea Society, December 9, 1993.

이와 같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감과 우려는 북한 핵문제에 인하여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는 북한의 핵개발이 주변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과 1995년으로 예정된 NPT연장에 대한 악영향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對北韓政策의 優先順位는 核問題 解決에 있다.

미·북관계의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미국은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好戰性을 완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1988년 한국정부의 「7·7선언」에서 표명된 대북한 포용정책에 준거하여 1988년 10월 31일 미 국무부의 외교관 행동지침 발표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완화시킨 바 있다. 즉, 미국은 미 외교관들이 제3의 장소에서 북한측 관리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고, 북한의 비공식·비정부 인사가 학술 및 기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였으며, 미국 시민의 방북을 사안별로 허용하고, 「외국자산규제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을 수정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수출을 허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⁹⁾

9) Daniel Russel, "U.S.-North Korean Relations," in Current Issues in Korean-U.S. Relations: Korean-American Dialogue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1993), p. 49; 吉炡宇 등 공저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 61 참조.

한편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북경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하여 여러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진전 촉구, 비무장지대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유해의 송환, 핵안전협정 체결 촉구, 테러리즘 포기 입증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게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의 상호 감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북·미간 직접 대화 및 관계 개선,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 등을 주장하였다.¹⁰⁾

미국의 대북한정책 기초를 요약하면 첫째,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둘째,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보다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며, 셋째,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 美·北韓 關係 懸案: 北韓 核問題

(1) 北韓 核問題 解決에 대한 美國의 目標 및 戰略

북한 핵문제를 國際關係 側面에서 보면, 1995년 「核擴散禁止條約」(NPT) 연장,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 방향, 미·중관계

10) Richard H. Solomon, "The Last Glacie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st-Cold War Era," 미 하원 외무위 동아·태 소위원회, 1991. 2. 11, p. 107; 吉燧宇, "北·美關係와 韓國: 過去, 現在와 未來" 「南北韓關係와 美國」(서울: 民族統一研究院 세미나시리즈 94-02, 1994), p. 11 참조.

개선 및 확충,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대화 등 제반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남북한관계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 東北亞地域 뿐 아니라 全世界的으로도 주목 받고 있는 複合的인 사안이다.

첫째,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전세계적 핵확산방지 분위기를 沮害하여 1995년의 NPT연장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일본이 역내에서 건설적인 안보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 개발에 자극받아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대북한 경제제재를 반대하는 등 미국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美·中關係에도 惡影響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미국은 냉전이후시대의 다양한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場으로 동북아지역에서도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 및 북한의 불참은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대화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北韓 核問題의 透明性 保障, 여타 국가 및 지역에서의 핵무기 개발의도 억지, NPT연장 협상에 대한 악영향 배제 등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은 北韓 核問題의 透明性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북한이 IAEA 사찰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남북한간 상호 사찰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이 핵무기를 해체하는데 합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라크 등 중동지역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성공리에 해결하여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려 하고 있다.

셋째, 核擴散禁止條約은 기탁국들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기득권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핵보유국들로부터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명백히 할 경우 NPT연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미국은 협상의 원칙에 대하여 1993년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저하고 광범위한」(Thorough and Broad) 접근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은 핵문제의 철저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안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핵문제와 미·북 관계개선을 「일괄타결」(Package Deal)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북한 핵협상을 戰術的 次元에서 보면,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외교적 접근이 적절하다는 인식하에 「항해도」(Road-Map)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항해도 접근방식은 협상상대의 목표 및 의도가 불명확할 때, 협상상대가 협상타결의 조건들을 제시하게 하고 이에 대응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항해도

접근방식에 따라 북한과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북한의 NPT탈퇴유보 철회를 억제시켰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協商의 手段으로 당근과 채찍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궁극적 당근은 미·북 관계개선이며,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채찍은 국제적 압력 및 대북한 경제·군사제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美·北 協商의 展開過程

미국은 북한의 NPT 脫退에 대응하여 유엔에서 결의한 회원국에 대한 핵문제 해결 촉진 권고¹¹⁾에 근거하여 1993년 6월 2~11일 뉴욕에서 미·북한간 제1단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제1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은 북한의 NPT탈퇴 유보선언을 유도하고 NPT체제 및 IAEA의 安全措置가 북한에 계속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IAEA 사찰 재개의 법적 근거를

11) 유엔 안보리는 제825호 결의를 통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하였다. 1. 북한에 대해 1993년 3월 12일자 서한에 담긴 NPT 탈퇴 선언을 재고하고 NPT에 대한 이행의무를 재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2. 또한 북한에 대해 조약상 핵무기 확산방지 의무를 준수할 것과 IAEA 이사회의 1993년 2월 25일자 결의안에 명시된대로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3. IAEA 사무총장에 대해 IAEA 이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계속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4.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이 이 결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문제해결을 촉진시켜 나갈 것을 권유한다. 5. 안보리는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제1단계 고위급 회담에서 핵확산방지 목적에 부합되게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을 지지할 것을 표명하였으며, 북한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NPT로부터의 탈퇴효력(the effectuation of withdrawal)을 일방적으로 정지(suspend)시키기로 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첫째,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둘째, 전면적인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과 상대방 주권의 상호존중 및 내정 불간섭, 셋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등 원칙에 합의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1993년 7월 14~19일 제네바에서 제2단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미국은 제1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NPT잔류를 수용했다는 전제하에 제2단계 회담에서는 IAEA 사찰문제 해결에 주력하였다.

제2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이 IAEA 사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IAEA와의 협상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NPT잔류가 기정사실화되었으며, 동 회담의 공동보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제1차 미·북 고위급 회담 공동발표문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북한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서 현존 흑연감속원자로와 그와 관련된 핵시설들을 경수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도입을 지지하며 이를 위한 방도를 북한과

함께 모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셋째, 양국은 IAEA 핵안전 조치의 완전하고 공정한 적용이 NPT체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넷째, 북한은 안전조치와 관련한 현안문제와 기타 문제들에 관한 IAEA와의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다섯째,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빠른 시일내에 남북회담을 시작할 용의를 재확인하였다. 여섯째, 핵문제 관련 현안 및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반적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2개월 내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IAEA의 대북사찰 및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1993년 9월로 예정된 미·북간 제3단계 고위급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일련의 비공개 실무접촉(1993. 11. 24~12. 29)을 통해 IAEA가 북한의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임시·일반사찰을 재개하는데 합의하였으나, 미·북간 실무접촉 합의사항에 대한 解釋上 差異로 인하여 대북사찰이 지연되었다. 즉, IAEA 임시·일반사찰에 대하여 미국은 NPT회원국이 수용하는 전면적 범위의 임시·일반사찰로 해석하였으나, 북한은 NPT탈퇴 유보의 특수상황에서 核安全措施의 連續性 維持를 위한 制限的 査察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북사찰의 지연으로 UN안보리의 제재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북한은 1994년 2월 15일 IAEA에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미·북 실무접촉이 재개되

었다. 미국과 북한은 뉴욕에서 가진 실무접촉 결과를 합의문 형식으로 1994년 2월 25일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3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시에 추진한다. 첫째, 미국은 한국의 1994년 틱스퍼리트 훈련 중지 결정에 동의한다. 둘째,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하여 북한과 IAEA간에 2월 15일 합의된 사찰을 실시한다. 셋째,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에서 재개한다. 넷째, 미국과 북한은 제3단계 미·북 회담을 1994년 3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IAEA의 연속성 사찰 결과,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남북 특사교환이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3월 21일로 예정되었던 미·북간 3단계 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¹²⁾

북한측의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의 불바다 발언사건과 국제공조체제에 의한 대북제재에 의하여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씨가 6월 15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개인적 자격으로 회담을 가졌다.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북한 방문후 김영삼 대통령에

12) 북한 핵문제 관련 미·북한간 협상 및 북한의 의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民族統一研究院,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25, 1994); Larry A. Niksch, *CRS Issue Brie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bruary 16, 1994).

게 김일성의 정상회담 개최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김 대통령이 즉각 수락함으로써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1994년 8월 25일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미국은 김일성이 카터 전대통령을 통하여 핵개발 동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7월 8일 제네바에서 미·북 3단계 회담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7월 8일 사망함에 따라 미·북 3단계 회담은 하루만에 연기되었으며,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8월 5~13일 개최된 3단계 1차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¹³⁾

첫째, 북한은 흑연감속로들과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으로 2백만kw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북한에 제공하며 그동안 북한에 흑연감속로들을 대신할 대용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경수로와 대용에너지 제공조치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받는 대가로 5만kw, 20만kw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의 건설을 동결하고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소를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밑에 두기로 하였다.

둘째, 북한과 미국은 정치·경제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

13) 미국과 북한간 합의문 중 합의사항에서 미국과 북한은 외교대표부(diplomatic representation)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는 바, 미·북간에는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고 핵투명성을 보장할 경우 미·북한간 관계개선에 대한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원칙론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조치로서 각기 상대방의 수도들에 외교대표부를 설치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전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할 일관된 용의를 표명하였다.

넷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 남아있으며 조약에 따르는 안전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미국과 북한은 전문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3단계 2차회담을 1994년 9월 23일 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3) 核問題 解決의 方向

미국의 대북한 협상노력은 북한이 사찰을 拒否할 수 있는 名分을 除去하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으며, 북한이 사찰을 거부할 경우 국제제재에 대한 중국 등의 반대명분도 약화시킨다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방향은 미·북 3단계 1차고위급회담의 결과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에 대한 북한측의 성실한 태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3단계 1차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에 따라 전문가회의를 3단계

2차 고위급회담이전에 개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9월 23일로 예정된 3단계 2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전제로 북한에 대하여 경수로 전환문제 및 연락사무소 설치를 가시화하기 위한 후속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3단계 1차회담에서 북한측의 타결방식인 일괄타결 방식에 접근한 태도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미·북 관계개선을 상호간에 약속함으로써 북한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현재와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었으나, 北韓 核問題의 過去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과거 핵문제에 대한 모호성 유지를 당분간 容認하면서 북한과의 연속적 회담 및 경수로 지원을 통하여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과거 핵문제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개발의 동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IAEA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안전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은 핵문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이 일탈하는 행위를 보일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엔안보리

決議案 형식의 단계적 대북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 단계인 外交的 制裁措置로는 북한 항공기·선박의 취항·기항 거부, 북한 주민의 입국 금지,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현지국에서 북한 외교관의 활동 여행 제한, 예정된 고위급 정부관리 의 訪問 取消 등이 있다. 둘째 단계인 經濟的 制裁措置로는 대북 금수조치, 경제봉쇄 및 대북경제관계 단절 등이며, 셋째 단계인 軍事的 制裁措置로는 해상봉쇄, 핵시설에 대한 폭격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미국이 단독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은 다음과 같다. 북한과의 대화단절,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 북한 군사력 움직임에 대한 공중감시 강화, 북한인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 「適性國交易法」(Trading with the Enemy Act)의 철저한 적용, 북한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강력 대응,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요구, 남한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 등을 상정할 수 있다.

3. 美·北韓 關係改善 展望

미국의 대북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정책의 優先을 두고 추진될 것인 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關係改善도 考慮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과의 3단계 1차회담에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워싱턴과 평양에 외교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3단

계 1차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 해결 전제조건하에 관계 개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점에 합의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미·북한간 3단계 2차회담에서 북한이 核透明性 보장 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경우 미국과 북한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양국간 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⁴⁾

1. 팀스피리트 훈련을 포함한 한 미합동훈련의 중지
2. 미·북 3단계 회담 재개
3.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재확약
4. 미·북간 고위급 회담의 지속
5. 한·미·북 3자간 평화협정 체결
6. 남북한 군비축소 유도
7. 「適性國交易法」의 대북적용 완화 또는 취소
8. 북한 흑연감속로의 경수로로의 전환 지원
9.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규정의 대북한 적용 완화

14)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등 5개국의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협력가능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Report of an Asia Society Research Project for the Rockefeller Foundation,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ember 1993.

10. 북한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참가 지원
11. 민간기업의 대북 경제협력 장려
12.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Bank) 등 국제금융기관 참가 지원
13.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14.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
15. 미·북한 관계 정상화

한편 미국은 미·북한간 회담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미·북 관계개선의 고려사항인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이행, 남북 상호사찰 이행, 미사일수출 중지, 테러행위 중지, 미군유해 송환, 대미 비방 중지,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 등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수준과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다.

미·북 관계개선의 속도와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미·북 3단계 2차회담에서 透明性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代案에 의하여 해결될 경우, 관계개선에 대한 미·북간 회담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1995년의 NPT연장 협상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유화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NPT체제 완전 복귀를 약속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북한에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교대표부를 설치하고 북한이 미국에 상응하는 형태의

외교대표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常時化할 수 있는 외교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북한간 관계개선을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핵개발 투명성 및 상기한 관계개선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단계적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미·북한간 국교정상화는 북한 핵투명성 확보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미국 국내법 절차상의 이유와 행정부와 의회간 관계의 複合性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適性國交易法」(Trading with the Enemy Act)과 「무기 및 첨단장비 수출 제한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가로 분류하여 대북관계를 규제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① 북한이 테러국가로 분류되어 적용받고 있는 조치, ②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적용받고 있는 조치 및 ③ 공산주의 국가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등이 있다.¹⁵⁾

15) 미 국무성이 Asia Society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나 대북한 무역규제 완화 등 조치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여타 규제법에 의하여 행정부의 이러한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Asia Society, 앞의 책, Appendix D 참조.

第Ⅲ章 日本의 對北韓政策

1. 日本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

가. 東北亞政策

(1) 東北亞政策 基調

냉전종결 이후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다원적 질서 속에서 자국의 국내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독자적인 리더십 발휘에 한계를 느끼고 일본에게 「世界的 同伴者 關係」 구축을 위한 政治·安保的 役割 分擔을 요구하고 있다.¹⁶⁾ 이에 따라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증대하고 있고, 동시에 地域強國으로서의 영향력과 지위를 확보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적 초강대국의 지위를 기반으로 정치·안보분야에서 역할증대를 모색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다. 이제까지 일본은 국내적 제약과 주변국들의 우려 때문에 지역문제에 대한 지도적 역할수행을 자제해 왔고 국제문제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국제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미국 및 주변국들의 요구에 따라 국제문제에서 더욱 능동적 역할수행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주변강대국들의 역할증대 요구를 활용하여 地域

16) Robert Hormats, "Roots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Vol. 70, no. 3(Summer 1991), pp. 132~149.

強國으로서의 地位確保와 影響力 增大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동북아정책 목표는 아시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政治·軍事的 役割을 分擔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정책 목표에 따라 일본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통해 미·일동맹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군사력 현대화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¹⁷⁾ 그리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추구 및 대외원조의 전략적 이용 등을 통해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¹⁸⁾

(2) 軍事力 現代化를 통한 獨自的 防衛力 確保 努力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56중기업무계획(1983~1987)」 및 「제1차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86~1990)」을 통해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 등 지역적 군사

17) 일본은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과 모잠비크 평화유지활동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함으로써(1992. 10. 14, 1993. 3. 26)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려 하고 있다.

18) 일본의 총리자문기구인 「방위문제간담회」도 일본이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유엔의 기치아래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朝日新聞」, 1994. 7. 19.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해 왔고, 「제2차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1991~1995)」(총22조 7천5백억 엔)을 수립하여 이지스함 도입 등 호위함 현대화, 최신예미사일 및 조기경보기(AWACS) 도입, 공중급유기 도입, F-15 국산화 등 前進防禦 능력 현대화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¹⁹⁾

일본 정부는 자위대 병력 충원의 어려움을 내세워 자위대의 감축을 위해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국내외에 설명하고 있으나 일본의 군사력 현대화 방향은 장기적으로 항공모함 도입 등을 통한 海外 長距離 介入 能力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海上輸送路 방위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위와 같은 군사력 현대화를 기반으로 자위대의 해상활동을 남지나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식적인 「專守防衛」 표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地域防衛」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1991년 1월 이후 필리핀으로부터 일본 항공자위대 공군기가 필리핀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받는 등 클라크 미군기지로부터 태평양에 있는 영국기지를 통해 카이로에 이르는 군사항공로와 싱가포르-스리랑카-오만-카이로에 이르는 군사항공로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최근 필리핀 기지

19) 前田壽夫, 「軍事大國・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軍縮問題資料」, No. 151 (1993. 6), pp. 64~66.

로부터의 미군의 철수와 함께 일본의 방위영역이 1,000해리 지역방위 이상 지역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²⁰⁾

또한 일본은 핵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석유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2010년까지 85톤의 플루토늄을 생산, 이용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대량 반입하고, 대규모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²¹⁾ 이에 따라 일본은 핵무기 전환이 가능한 다량의 플루토늄을 보유·사용하는 핵에너지 이용체제를 갖추게 되었다.²²⁾

20) Jung-Suk Youn, "US And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 no. 2(Summer 1992), p. 375.

21) 일본은 1992년 11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반입한 데 이어 1993년 4월 28일 아오모리 현 룩카쇼무라(六ヶ所村)에 세계 최대의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착공하였고, 1994년 4월 5일에는 후쿠이(福井)縣 쓰루가(敦賀)市の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를 시험가동시켰다. 鈴木篤之, "日本原子力政策とプルトニウム問題," 「國際問題」, no. 397 (1993年 4月), pp. 43~53; 「朝日新聞(夕刊)」, 1994. 4. 5.

22)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 계획이 핵확산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는 국내외 여론을 撫摩하기 위해 1994년 5월 18일 잉여 플루토늄을 갖지 않는 플루토늄 수급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일본은 고속증식로를 장래 원자력발전의 주력으로 삼고 2020~2030년경 실용화하기로 했던 1987년의 장기 계획안을 2030년경으로 다소 연기하였고, 2000년에 연간 3000톤 규모로 계획했던 우라늄 농축 규모도 1500톤 정도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일본핵개발에 대한 외국의 의혹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며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朝日新聞」, 1994. 6. 14; 1994. 6. 27; 1994. 7. 3.

일본은 자국이 「非核3原則」(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견지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핵에너지 이용 계획은 환경오염 등 안전성의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손쉽게 핵폭탄 제조용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核潛能力 측면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4년 8월 28일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한 대형로켓 「H-2」의 2호기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주개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²³⁾ 그러나 「H-2」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ICBM)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과 함께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평화적인 목적과 이용을 내세우면서 軍事力 現代化와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尖端技術 開發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로써 일본은 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潛能力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3) 對外援助의 戰略的 利用

일본은 아시아국가들에게 자본, 기술 및 경제원조를 제공

23) 「朝日新聞」, 1994. 8. 29.

하고 이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제한된 대외원조 및 정치·경제적 역할을 補充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 일본의 獨自的인 影響力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제문제에서 정치·경제 및 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원조계획」(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강화하고 있다. 냉전시기에 일본은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와 세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에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일본은 이미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제4차 해외원조 계획 중기목표를 500억 달러로 책정하여 달성한 바 있으며 (1988~1991년간 누계 380억 달러, 1992년 실적 120억 달러), 냉전종결과 미국과의 「世界的 同伴者關係」에 따른 美·日 役割分擔 및 일본의 政治·安보的 影響力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5차 중기목표를 제4차보다 50% 증가한 75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²⁴⁾

일본은 1991년 4월 「대외 원조제공의 4가지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원조계획을 자국의 정치·안보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手段으로 적극 이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

24) 「朝日新聞」, 1993. 2. 26.

다.²⁵⁾ 또한 일본은 해외원조계획의 국민총생산(GNP) 비율을 1991년도 실적인 0.31% 이상으로 높여(유엔이 선진국에 권고한 원조비율은 0.7%) 무상원조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동서냉전의 종결이후 원조 필요성이 절실한 동유럽,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의 환경대책 프로젝트나 난민대책 등에 집중적으로 해외원조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

(4) 政治·軍事的 役割增大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유엔常任理事國地位를 獲得하기 위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한데 이어(1992. 10. 14), 모잠비크 평화유지활동에 일본의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1993. 3. 26). 일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위한 實積을 쌓아 나가려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오와타(小和田恒) 駐유엔일본대사는 1994년 6월 8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안보리 개편

25) 일본의 원조제공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피원조국의 군사비,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무기 수출과 수입, 둘째, 민주화를 위한 노력, 셋째, 인권과 자유존중, 넷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이다. Takao Kawakami, "Guidelines for Foreig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2, 1993.

소위원회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 희망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였다.²⁶⁾ 일본은 「拒否權 없는 常任理事國 地位」확보를 위하여 유엔회원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더욱 적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은 국제문제에 대한 정치·안보적 역할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海外派兵을 合法化하기 위한 法制度 改正을 추진하고 있으며, 新保守化로의 政界再編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국제분쟁에서 일본에 대한 역할증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내적으로 헌법을 확대 해석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또한 자위대의 해외파병 합법화를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국내적으로 「보통국가」를 내세워 정치·군사적 대국화를 지향하기 위한 新保守主義的 政界再編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미해결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구실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有事立法」 논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지역분쟁에 대한 일본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헌법의 확대해석 및 헌법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

26) 「朝日新聞」, 1994. 6. 9. 이에 대해 미국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일본과 독일을 편입시키고 안보리의 산하기구들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개편안을 유엔에 공식 제안함으로써(1993. 6. 30) 일본에 대하여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지위 부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朝日新聞」, 1993. 7. 1.)

타 前연립내각을 주도했던 新生黨은 「보통국가론」을 내세워 국제적 역할증대 및 유엔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북한핵문제를 계기로 「유엔에 의한 보편적 안전보장」 개념 도입 및 「有事立法」을 추진함으로써 평화헌법을 擴大 解釋하려 하거나, 改憲論議까지 활성화시키려 하였다.²⁷⁾

비록 무라야마 내각 출범(1994. 6. 29)과 신내각의 평화주의적 외교노선 채택으로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경향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계재편 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1994년 1월 29일 채택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를 치루어 나가면서 保守主義 兩黨制로의 회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²⁸⁾ 이에 따라 일본은 「보통국가」 지향을 구실로 政治大國化 노선을 다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²⁹⁾

결국 일본은 평화주의적 외교노선을 선언한 무라야마 신내각 출범(1994. 6. 29)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27) 「讀賣新聞」, 1994. 4. 24; 「朝日新聞」, 1994. 5. 11.

28) 일본 정계는 새로운 선거제하에서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궁극적으로 신보수(舊연립여당세력+자민당내 보수적 개혁추진 세력+사회당내 중도 우파세력) 對 리버럴(자민당 주류파+사회당+사키가케)이라는 양당제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

29) 일본은 하타총리가 1994년 6월 25일 내각총사퇴를 발표함에 따라 6월 29일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위원장을 총리로 하는 自民, 社會, 新黨사키가케 3당 연립정권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무라야마 내각은 「반신생·공명」이라는 공동목표 이외에 연립정권을 묶어주는 결속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면에서도 점차 당파간 알력이 증대되어 분명한 외교노선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으로 보이며, 나아가 한반도에서도 정치·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 등 정치·안보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³⁰⁾

나. 韓半島政策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으로의 進出經路 혹은 아시아대륙으로부터의 외부세력 침투를 막기 위한 緩衝地帶로서 중요시하여 왔고, 이에 따라 정치·경제 및 안보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와 관련, 일본은 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② 자국에 적대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며, ③ 한반도에서 미·중·러 등 타강대국 보다 더 큰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대한반도 인식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하에 내심 대북한접근을 통한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전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동북아의 국제질서와 미국의 동북아정책 그리고 미·일관계 및 한·일관계에 의하여 제약을 받아 한국에 편향된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였다.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30) 松村五郎, “軍備管理の檢證と日本の役割,” 「新防衛論輯」, 제19권, 제3호 (1991. 12) p. 66.

안보문제에서 발언권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으며, 한국의 중·러와의 수교를 계기로 재차 對北韓 接近 政策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전망과 관련, 일본은 한반도에서 장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입각한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냉전이후시대 미·일 역할분담 및 경제적 영향력을 중시하는 국제질서 변화속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반도에서도 정치·경제·안보문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對北韓 接近 政策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상당기간 한·미와의 전략적 유대관계 및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틀 내에서 전개될 것이고, 한국에 갖고 있는 일본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韓國偏向의 南北韓等距離外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무라야마 신임총리도 취임 첫 기자회견(1994. 7. 1)에서 일본의 외교정책은 유엔중심주의에 바탕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하였던 호소카와 및 하타 내각의 외교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7월 1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일본정부가 추진해온 기존의 대한, 대미관계의 기본방침을 계승하고 북핵문제에 대하여 한·미·일 3국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임을 전달

했다.³¹⁾

2. 日本의 對北韓政策

가. 對北韓政策 基調

일본의 대북한정책 기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남북한 전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에 따라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북한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냉전시대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남북한관계 진전여부를 고려하여 한국과 우선적으로 우호협력관계를 도모하였고, 동시에 북한과는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와 민간차원의 교류에 한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政·經分離政策을 취하여 왔다.

최근 미·일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 요구와 한·소수교 및 한·중수교 등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에 따라 일본은 對北韓 接近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친북한정책을 취해 왔던 사회당의 위원장을 총리로 하는 무라야마 신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일본은 전후처리 및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서 대북정책에서의 변화를

31) 「朝日新聞」, 1994. 7. 2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3단계 2차 미·북한 고위급회담(1994. 9. 23)에서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 보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적극적인 대북한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日·北韓關係 懸案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1991년 1월 제1차 일·북한수교교섭(30~31)을 개최한 이래 제8차 수교교섭(1992. 11. 5~6)까지 8차에 걸쳐 수교교섭을 개최하였는 바, 양측 간 수교교섭에서 논의될 현안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北韓 核問題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자국 안보에 대한 直接的인 威脅으로 인식하고 있다.³²⁾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남한의 핵보유를 자극하거나 향후 통일한국의 핵보유 가능성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라야마 신임총리도 국회에서 행한 취임 소신표명(1994. 7. 18) 연설에서

32) 또한 일본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km의 북한 「노동1호」 지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방위청은 1994년 7월 15일 공표된 1994년판 「防衛白書」에서 러시아의 군사력보다 북한의 군사력을 최대의 위협요인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防衛廳 編, 「防衛白書」(平成 6年版), pp. 47~58.

“북한핵문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 요인”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북한의 핵의혹 불식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와의 긴밀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³³⁾

일본은 북한에 대해 IAEA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을 수락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한·미와의 협조하에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위한 外交的 壓力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IAEA사찰촉구에 대하여 자신의 핵문제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일본의 핵사찰 수용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제3단계 미·북한고위급 회담을 통해 北韓 核問題와 對美關係改善 문제를 「一括妥結」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제3단계 미·북한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핵과거 보다는 장래 북한의 핵동결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일·북한수교교섭에서 北韓의 核過去에 대한 透明性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북한간에 논의되고 있는 북한원자로의 경수로 전환 및 이에 필요한 경제지원 문제를 일·북한수교교섭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경수로 전환 지원 등 자국의 대북경제지원문제가 미·북한 고위급회담에서 논의

33) 「朝日新聞」, 1994. 7. 19.

되는 것을 견제하고, 동시에 일·북한수교교섭에서 이 문제를 다른 현안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독자적인 대북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일본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건설(룻카쇼무라) 및 고속증식로 시험가동(문주) 등 일본의 플루토늄 생산 및 도입 노력을 비판하면서 맞대응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북한의 핵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과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수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³⁴⁾

(2) 補償問題

북한은 식민지시대 일·북한관계를 「國際法上 交戰關係」라는 인식하에 일본에게 전승국으로서의 賠償과 補償 그리고 전후 40년에 대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補償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인 것이며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입장에서 패전국으로서의 배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식민지 시기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북한 수교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한·일기본조약에서 정한 틀과 적합성 내에서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으로서 일·북한수교교섭에서도 경제문제는 財産請求權問題로서

34) 그러나 일본정부는 수교교섭을 핵문제 해결 이전이라도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취급한다는 입장이다.³⁵⁾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배 기간중의 加害 상황에 대한 舉證責任을 북한측에게 전가하고 있고, 북한이 충분한 증거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권의 규모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北韓의 政治的 讓步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의 보상과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핵 및 「노동1호」 개발 시도 등 對日 안보위협 카드를 활용하여 보상액수를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3) 過去事問題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한반도의 식민지배에 대하여 사죄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 인정과 성실한 사과를 촉구하는 등 원칙론적인 입장을 최대한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 인정과 사죄 표명을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보상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³⁶⁾

35) 中平立, “日朝交渉の現場から,” 「外交フォーラム」(1992年 2月), pp. 46~50.

36) 山本剛士, “日朝交流の現状と問題點,” 「提言・日本の朝鮮政策」(東京: 岩波書店, 1989), p. 4~5.

또한 북한은 김일성정권의 正統性 제고와 승전국으로서의 보다 많은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김일성정권의 출발시기를 만주에서 일본제국주의와 싸운 항일무장 투쟁시기로 규정하고, 이를 일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남한의 문헌에 의존하면서 현재의 북한정권과 항일투쟁시기의 항일운동세력과의 연결이 약하거나 단절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는 전쟁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賠償」이나 「補償」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財産請求權」의 관점에서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양측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과거사 문제는 수교교섭에서 핵문제 및 보상문제에 대한 타결 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請求權 方式의 補償을 대가로 政治的으로 妥結될 것으로 예상된다.

(4) 李恩惠問題

이은혜문제는 일본경찰청의 조사 결과 대항항공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 선생인 이은혜가 일본인으로서 북한에 있을지 모른다는 결론을 내린후 일본측이 북한에 조사를 요청한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사 및 보상문제에 대한 교섭에서 자신의 立地가 弱化되었을 때 이은혜문제를 간간히 제기함으로써 교섭에서 主導權을 回復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여

왔다.³⁷⁾

이에 대하여 북한측은 이 문제가 남한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를 수교교섭에서 제기하는 것 자체에서 일본의 교섭태도를 불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금후에도 수교교섭에서 일본측이 과거사 및 보상 문제 등에서 수세에 몰릴 경우 협상지위 제고를 위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은혜 문제는 수교협상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시도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지만 보상협상이 진척되면 사실 확인을 약속하는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북한간에는 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향상 문제와 일본인 처문제 등의 제반문제가 관계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측은 제2차회담(1991. 3. 11~13)에서 회담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수교이전이라도 일본인 처의 일본왕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본인 처문제와 수교교섭 진전을 連繫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3. 日·北韓 關係改善 展望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북한간에는 핵문제 이외에

37) 일본은 제3차(1991. 5. 20~22) 및 8차 일·북한 수교회담(1992. 11. 5~6)에서 이은혜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보상협상에서의 지위약화를 만회하려 하였다.

보상 형식과 액수 문제, 그리고 역사해석 문제 및 이은혜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난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의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를 포함한 일·북한간 諸般 懸案問題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북한수교의 필수적인 현안인 핵문제가 미·북한 고위급회담에서 해결되면 일·북한수교 교섭은 양국간 현안문제에 대한 북한의 양보를 기초로 하여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 노동당과 友黨관계에 있던 사회당 위원장의 총리 취임은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라야마 내각은 평화주의 노선에 따라 과거청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며, 전후처리의 일환으로서 대북수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³⁸⁾

결국 북한핵문제가 미·북한간 협상을 통해 타결될 경우 일본은 무라야마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대북수교 협상을 한·미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북 고위급회담이 실패하여 북한 핵문제를 둘러

38) 북한도 사회당의 위원장이 총리로 취임한 사실을 환영하면서 양당간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발전 및 양국간 수교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朝日新聞」, 1994. 7. 1.

싸고 다시 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일본은 평화노선의 무라야마 내각 출범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일 협조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³⁹⁾ 이와 관련, 무라야마 일본총리는 나폴리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 직전에 열린 미일정상회담(1994. 7. 8)에서 미·일안보조약 유지 등 과거정권의 외교정책 계승과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조체제 유지를 약속하였다.⁴⁰⁾

39) 그 이유는 첫째, 무라야마 내각은 자민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연립내각으로서 기본적으로 약체내각이기 때문에 한·미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외무관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며, 둘째, 일본은 정권 변동에 관계없이 북한 핵문제를 자국 안보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40) 「朝日新聞」, 1994. 7. 9.

第Ⅳ章 美·日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1. 美·日의 對北韓 關係改善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가. 美·北韓 關係改善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미·북 관계개선은 남북한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북 관계개선이 비록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兩側이 關係改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는 핵문제 이외의 여러가지 사안이 논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북한간 논의사항 중 상당부분이 남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양측의 논의는 南北韓關係에도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칠 것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상호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북한간 직접교섭이 훨씬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미·북 관계개선은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조정은 남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북 관계개선은 남북한관계에 間接的으로도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直接的 影響

상기한 美·北 關係改善과 同伴될 것으로 豫想되는 措置중 남북한관계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와 韓半島 駐屯 美軍 減縮問題이다.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1994년 팀스피리트 훈련은 연기된 상태이다.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문제는 미·북한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제기할 가능성이 많은 문제이며, 美國은 이미 駐韓美軍 減縮計劃을 設定하였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그 實踐이 留保된 상태이다. 따라서 미·북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주한미군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南北韓 軍備縮小 問題이다. 남북한 군비축소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북한 군사력의 휴전선 부근 전진배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반도의 군사력이 불균형상태를 보이게 될 것이므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는 남북한 군사력의 감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과의 平和協定 締結問題이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양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南韓을 排除한 상태에서는 북한과 어떠한 형태의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북한과 한국·미국간 또는 남북한간 평화협정을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흑연감속로의 경수로 전환문제이다. 북한의 경수로 전환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북한은 북한이 현재 건설중인 5만 kw 및 20만kw 흑연감속로의 건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2백만 kw 발전능력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민족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에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경수로 건설지원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국제적 공조체제하에 「多者的 支援機構」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美國의 投資 및 貿易制限 措置 緩和는 北韓의 經濟建設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및 아·태경제협력체 참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난 타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間接的 影響

北韓 核問題의 解決은 核問題의 國際的 屬性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은 각기 조금씩 다른 입장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4강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立場差異는 미·북한 관계개선 과정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예를 들면, 한반도 주둔 미군 축소 문제나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문제 등에 대해서도 주변 4강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변4강의 미·북 관계개선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은 남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日本, 中國, 러시아 등 3국의 北韓과의 關係 變化를 예상할 수 있다. 日本은 우선 미·북 관계개선이 진전될 경우, 北韓과의 修交를 摸索할 것이다. 중국은 미·북 관계개선에 따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러시아도 北韓에 대한 過去의 影響力을 回復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미국 또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증대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변국가들의 대북한 관계변화는 남북한관계에 주변국가들이 介入할 可能性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북 관계개선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 보다 더 활발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경우 美國은 동북아지역 안전의 保障者로서 또는 仲介者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東北亞地域 安保를 위한 南北韓과 美·日·中·러 등 6개국간 多者間 安保協議體의 구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한반도문제를 다루게 될 경우, 남북한관계의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남북한관계 진전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미·북 관계개선은 「豆滿江地域開發計劃」(TRADP) 등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는 현재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접경 3국과 한국, 몽골 등 비접경국가가 정회원국으로 일본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中國의 役割이 가장 積極的이었던 반면, 北韓과 러시아는 相對的으로 疏外된 면이 있었다. 북한은 또한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외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남한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노력은 핵문제와 북한의 투자위험도 등으로 인하여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북 관계개선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건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 및 무역 증대는 북한으로 하여금 開放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남한과의 경제관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 日·北韓 關係改善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1) 直接的 影響

일·북한 수교후 北韓과 日本사이의 經濟交流은 短期的으로

北韓經濟를 活性化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북한에게 제공할 보상자금은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 난을 극복하는 데 긴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북한에 제공되는 보상자금은 북한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생필품 및 식량부족과 에너지, 수송분야 등 사회간접 자본의 만성적 애로현상을 短期的으로 緩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北韓經濟 沈滯의 本質的인 원인은 자력갱생의 閉鎖的 經濟路線과 中央執權的인 計劃經濟 體制의 非效率性 그리고 政治·軍事 優位의 非合理的인 經濟政策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한 보상 및 경제교류 증대로 단기간내에 북한 경제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북한 수교에 의한 경제교류 증대가 남북한 경협에 주는 영향은 북한경제 재건의 성공 여부 및 일·북한경제교류 증대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의 보상금 및 경협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북한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일·북한 사이의 경제교류를 증대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北韓은 開放 必要性을 높이 評價하고 대외개방을 가속화하여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경제의 對日依存 현상이 深化됨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경제교류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일간 양국

은 북한 시장을 둘러싸고 競爭關係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계 및 운수장비 중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南北韓間에 相互 補完關係를 강화하고 통일을 대비한 경험을 증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 증대는 이에 따른 인적왕래 및 정보 교환 증대로 北韓 社會의 變化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은 통일비용을 절감하면서 통일과정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이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대외개방과 체제개혁을 단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가상 시나리오는 北韓 經濟가 日本의 經濟支援으로 一時的으로 活性化되는 경우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개방보다는 部分的인 對外開放을 추진하고 남한과의 경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이는 북한이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남한과의 경험보다는 체제안정과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일본과의 개방 및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조건으로 일본에게 북한과의 경제협력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 일·북한 경제교류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범위를 크게 제약할 것이고 남북한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로 가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북한수교후 일본의 대북한 경제지원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消極的인 開放政策으로 인해 북한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남북한 관계에서 긴장이 지속됨으로써 일·북한간 경제교류도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북한은 일본의 경제진출을 자극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대남한 관계개선과 부분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반적인 대남정책 전환을 단행하지 않는 한 남북한 경협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네번째 시나리오는 일·북한경제 교류를 통한 경제회복 노력이 실패하고 남북한 사이의 經濟力 隔差가 擴大되어 북한이 남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제고시키기보다는 한국에 대해 더욱 피해망상적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는 남북한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의 평화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일·북한수교가 남북한 경협에 미칠 효과를 전망하면, 북한은 일·북한수교 후 첫번째 시나리오처럼 대일 경제협력을 증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남한과의 부분적인 경협도 선택적으로 기도해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번째 시나리오처럼 체제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남한과의 경협보다 체제안정과 선진기술 및 자본을 제공해 줄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南韓과의 經協은 制限的이고 補完的

인 次元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2) 間接的 影響

일·북한수교는 北韓의 開放을 部分的으로나마 促進하는 계기가 될 것이나 北韓의 개혁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北韓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日本資本의 對北韓 投資를 促進하기 위한 부분적인 개방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지나친 대외개방이 體制崩壞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制限的이고 選擇的인 改革·開放政策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北韓은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제정하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만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기업법 21조는 北韓의 「직업동맹」이 종업원활동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여전히 대외개방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북한수교는 초기 단계에서 대외개방 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일 것이나 체제개혁 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交叉承認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가. 東北亞秩序 再編

동북아지역은 냉전시대에 이데올로기적 對立이 가장 尖銳

한 地域의 하나로 지목되는 곳이었으며,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도 冷戰의 殘在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는 아직 미래의 방향이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冷戰의 遺産을 清算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냉전이후시대의 세계질서도 아직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동북아지역의 경우에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이후시대에 東北亞地域의 國際秩序를 變化시키고 있는 근본적 동인은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라 할 때, 한반도에 대한 교차승인의 완성은 북한에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의 완성은 東北亞地域의 不安定한 國際關係의 틀을 安定化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의 동북아지역 국제관계가 북한의 핵문제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면,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관계정상화는 동북아지역 국제질서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지역 국가간 관계가 안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北韓의 東北亞秩序 參與는 북한이 고립 및 패쇄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동북아지역 국제관계의 자연적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현재와 달리 經濟的 면에서는 域內國家間 多角的인 經濟協力과 軍事·安保的 면에서는 域內 國家間 信賴 構築 및 軍備縮小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다자간 협의체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탈냉전의 국제적 조류로 인하여 동북아지역에 형성된 잠정적 국제관계는 북한의 참여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형성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북한관계의 진전 또는 교착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문제인 동시에 새로운 동북아 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南北韓 平和體制 構築

미·북 및 일·북한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주변4강에 의한 南北韓 交叉承認이 完成될 것으로 전망된다. 4강의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 완성은 북한이 「대남 사회주의 혁명전략」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國際的으로 否定하는 것으로서, 北韓도 南北韓 交叉承認을 契機로 남북한 분단상태를 現實的으로 認定하고 남북한간 냉전적 대치관계를 남북한 평화공존관계 혹은 화해관계로 전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 교차승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간 정치적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것이고, 南北韓의 本格的인 協商體制 進入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고 대남평화공존정책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周邊國들의 保障役割이 期待된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군비 통제방안」(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신뢰구축→군축)을 실현함에 있어서 南北韓 兩側의 自主的인 努力이 追加되어야 할 것이지만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중개, 감시 그리고 보장에 대하여는 주변국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교차승인은 주변4강의 韓半島에 대한 影響力 擴大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고 러시아가 국내정치·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문제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남북한 교차승인은 韓半島에서 日本과 中國의 影響力을 相對的으로 擴大하는 結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자신의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 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제도화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軍事的 信賴構築 및 軍縮問題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한반도에 한국전쟁이후의 군사적 대치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南北韓사이에는 大規模 兵力이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軍事的인 緊張狀態가 持續되고 있어서 지역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및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북한의 「노동1호」 지대지 미사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과 日本은 軍事的 緊張關係가 持續되고 있는 韓半島에서 南北韓간의 신뢰구축 및 군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를 남북한이 주도하더라도 그 실천에 대해서는 國際的 檢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신뢰구축 및 군축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2+4」 등 다자간 접근에 관한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2+4」 등 다자간 접근이 시도될 경우, 이를 통해서 남북한간 信賴構築 措置들과 아울러 총병력 감축 및 생화학병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의 군축 및 보장 조치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교차승인을 계기로 북한측에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韓半島의 平和保障國의 일원으로서 남북한간의 군비통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에 참여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남북한 양측의 군사력 및 군사배치 이동에 대한 정보교환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한 엄격한 감시·통제 등 검증기술면에서 支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일본에 대한 감정으로 인하여 일본의 한반도 군

비통제에 대한 인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는 미국과 중·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재정긴축을 이유로 검증 등에 관한 日本의 經濟·技術的 貢獻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일본은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第 V 章 結 論

美·日의 對北韓 修交에 의하여 남북한 경제교류가 증진된다면 이는 北韓의 開放化를 促進할 뿐만 아니라 北韓의 經濟力 增大와 이에 따른 한국의 統一費用 減少 效果를 발생시켜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차승인은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한 周邊4強의 影響力 增大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일·북한 경제교류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확대 및 상호 보완성 증대보다는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남북한간 및 韓·日간의 競爭關係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교차승인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政治的 側面에서 韓半島의 政治·經濟 狀況에 周邊四強의 影響力이 增大된다는 사실이다. 우선 주변4강이 남북한 양국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전략적으로 구사하게 된다면 북한의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주변4강은 순수한 한반도의 평화보장 차원을 넘어서 남북한의 통일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거나 4강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安保的 側面에서 交叉承認에 의한 北韓과 西方間의 경제협력 증대가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보다는 김정일의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대하는 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간 긴장

관계가 고조될 수 있다.

셋째, 經濟的 側面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미·일의 대북한 수교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 및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증대될 경우,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소홀히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은 한·일간에 대북 경제협력 문제를 둘러싸고 경쟁 관계를 조성할 위험성을 內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미·일의 대북한 수교가 한반도통일 문제에 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저지하고 주변국들로부터 통일에 필요한 건전한 정치·경제·안보적 협력을 誘導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對應 方案을 강구할 必要가 있다.

첫째, 韓國은 미·북한 및 일·북한 수교후 韓半島問題를 解決하는 과정에서 北韓의 誤判 등 안보상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한·미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駐韓美軍의 繼續 駐屯 등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를 재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김정일체제의 붕괴로 야기될 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위험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주변국들도 한반도통일 과정 및 통일이후의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이 지역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주변국들과 협의하여 주한미군 잔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韓國은 日本에 대하여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일본의 國際的 役割增大에 대한 轉向的인 受容 및 認定을 통하여 일본을 한반도통일을 위한 정치·경제적 협력 세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대일 협조체제 유지를 통하여 일·북한 수교후 일본의 대북한 경제원조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경로를 통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협력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추진하려 하고 있는 일·북한수교 후의 일·북한 경제협력에 대하여도 과민한 경계보다는 일·북한의 경제협력을 이용한 北韓의 改革開放 誘導 및 韓國의 政治 經濟的 實利確保 戰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周邊4強 중 어느 한 국가의 압도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중·러 3국간의 일정한 牽制와 均衡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한국은 한반도 통일문제가 지나치게 국제적 경쟁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민족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은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를 협의함과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하여 북반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多者間 安保協議體를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 등 지역강대국의 국제적 역할을 건설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는 전지역적인 다자간 안보 협의체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반도문제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한 한반도의 직접 이해 당사국인 남북한 및 동북아 4강간에 小地域的인 接近을 통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국은 주변국들에게 한반도통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韓半島統一에 대한 周邊國들의 憂慮를 緩和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통일한국에 대하여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일본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주변국들 공동의 우려사항인 북한의 핵 의혹이 해소되어야 비로서 한반도의 통일과정도 국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북한의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民族統一研究院.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_____. 「南北韓關係와 美國」.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세미나 시리즈 94-02, 1994.

_____.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Asia Society.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an Asia Society Research Project for the Rockefeller Foundation, 199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94.

Government Printing Offic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ume 15, Part 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Hormats, Robert. "Roots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Vol. 70, no. 3, 1991.

Huntington, Samuel P.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Survival*, Vol. XXXIII, No. 1 (January/

- February 1991). pp. 15~24.
- Kawakami, Takao. "Guidelines for Foreig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2, 1993.
- Mazarr, Michael J. "Lessons of the North Korean Crisis." *Arms Control Today*, July~August, 1993.
- Nicksch, Larry A. *CRS Issue Brie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94.
- Republic of Korea. "Paper on Northeast Asia Security Cooperation." ASEAN Regional Forum Senior Officials Meetings (ARF-SOM) May 23~25, 1994.
- Roberts, Brad. *U.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MIT Press, 1992.
- Russel, Daniel. "U.S.-North Korean Relations." in *Current Issues in Korean-U.S. Relations: Korean-American Dialogue*.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1993.
- Scalapino, Robert A.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 Solomon, Richard H. "The Last Glacie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st-Cold War Era." 미 하원 외무위 동아 태 소위원회, 1991. 2. 11.
- Sutter, Robert G. *East Asia and the Pacific: Challenges*

- for U.S. Policy*. Boulder: Westview Press, 1992.
- Taylor, William J. Jr. "U.S.-ROK Security Relations: An American View." The 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Sejong Institute/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onference on *America and Korea in a Changing Northeast Asia Order*, Seoul, Korea, October 13~14, 1993.
-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American Policy*.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1994.
- Youn, Jung-Suk. "US And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 no. 2, 1992.
- 防衛廳. 「防衛白書」. 平成六年.
- 鈴木篤之. "日本原子力政策とプルトニウム問題." 「國際問題」. no. 397, 1993年 4月.
- 中平立. "日朝交渉の現場から." 「外交フォーラム」. 1992年 2月.
- 前田壽夫. "「軍事大國 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軍縮問題資料」. No. 151, 1993. 6.
- 松村五郎. "軍備管理の檢證と日本の役割." 「新防衛論輯」. 第19卷, 第3號, 1991. 12.
- 山本剛士. "日朝交流の現状と問題點." 「提言 日本の朝鮮政策」. 東京: 岩波書店, 1989.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93-03 中國의 改革·開放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北韓 官僚腐敗 研究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북한의 대남동향 분석(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일 WORKSHOP :

KOREAN PENINSULA DEVELOPMENTS AND U.S.-JAPAN-
SOUTH KOREA RELATIONS (vol. 1)

KOREAN PENINSULA ISSUE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2)

KOREAN PENINSULA TREND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3)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研究報告書 94-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9月 日

發行日 1994年 9月 日
